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의 이해

납세자보호담당관실



CONTENTS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의 이해



- Ⅰ 납세자 권리보호의 필요성
- Ⅱ 납세자보호 개요
- Ⅲ 주요 권리보호 조직 및 제도
- Ⅳ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 방안
- Ⅴ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CHAPTER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의 이해

I

납세자 권리보호의 필요성



Ⅱ 납세자 권리보호의 필요성



CHAPTER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의 이해

II



납세자보호 개요

- 1 제도 연혁
- 2 조직 및 제도 현황
- 3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흐름
- 4 세무조사 분야 권익보호 업무 흐름

III 제도 연혁



'96.12.30. 납세자의 권리를 국세기본법에 별도의 장으로 신설

'97.06.30.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고시

'99.09.01. 전국 세무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설

'99.09.01. 납세서비스헌장 선포

'08.05.01. 납세자보호위원회 전국 세무서 설치 (고충민원, 조사 기간연장·확대 심의)

'08.07.01. 해피콜 실시 (세무조사 모니터링 시초)

'09.05.01.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시행

'09.08.19.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관 신설

'09.10.26. 권리보호요청 제도 시행

'14.01.01. 납세자보호위원회 법제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8)

'17.11.30. 세무지원 소통주간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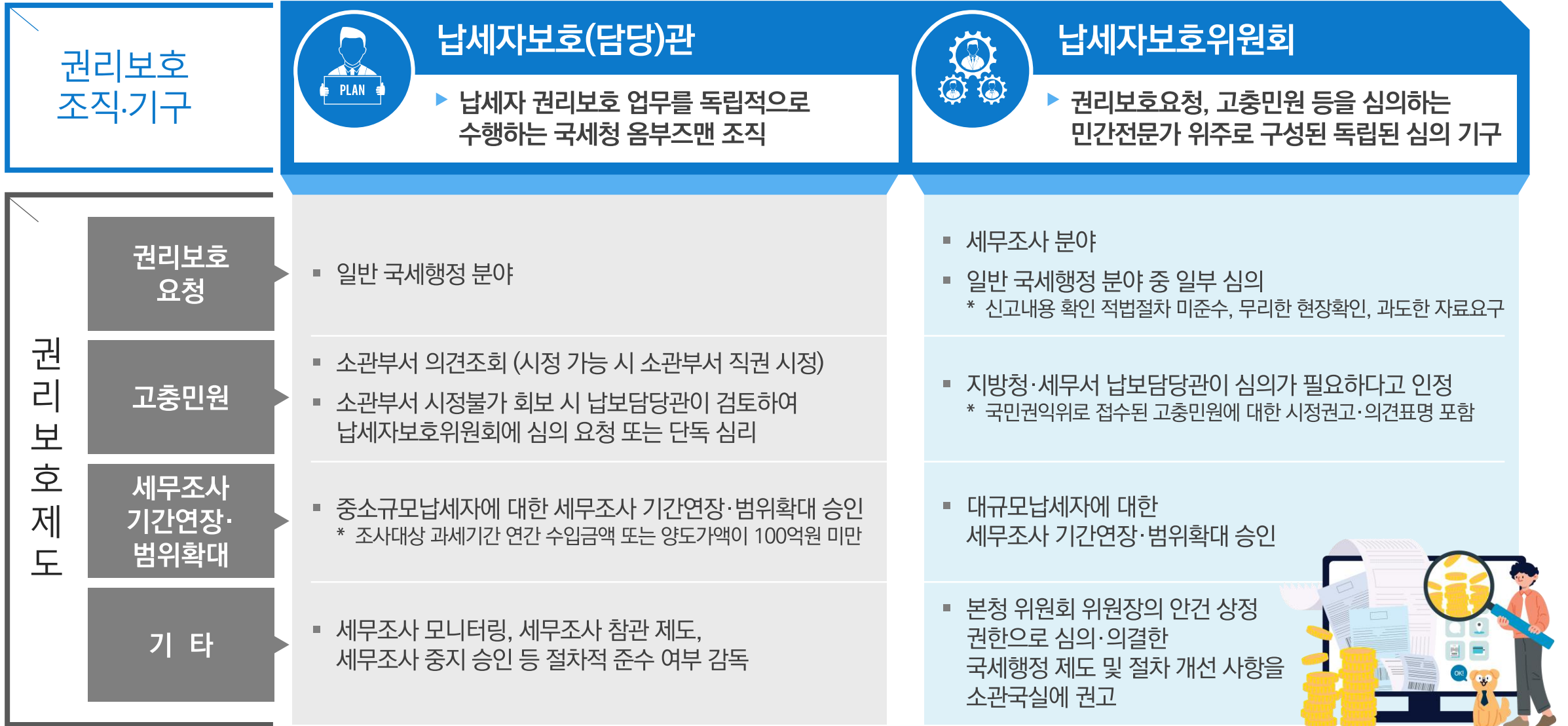
'18.02.01. 납세자권리헌장 2차 개정

'18.04.01. 납세자보호위원회 개선 (국세청 위원회 신설, 심의대상·외부위원 확대 등)

'18.09.03.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방안 도입 (조사팀 교체명령, 세무조사 참관제도 등)

'21.01.04.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 개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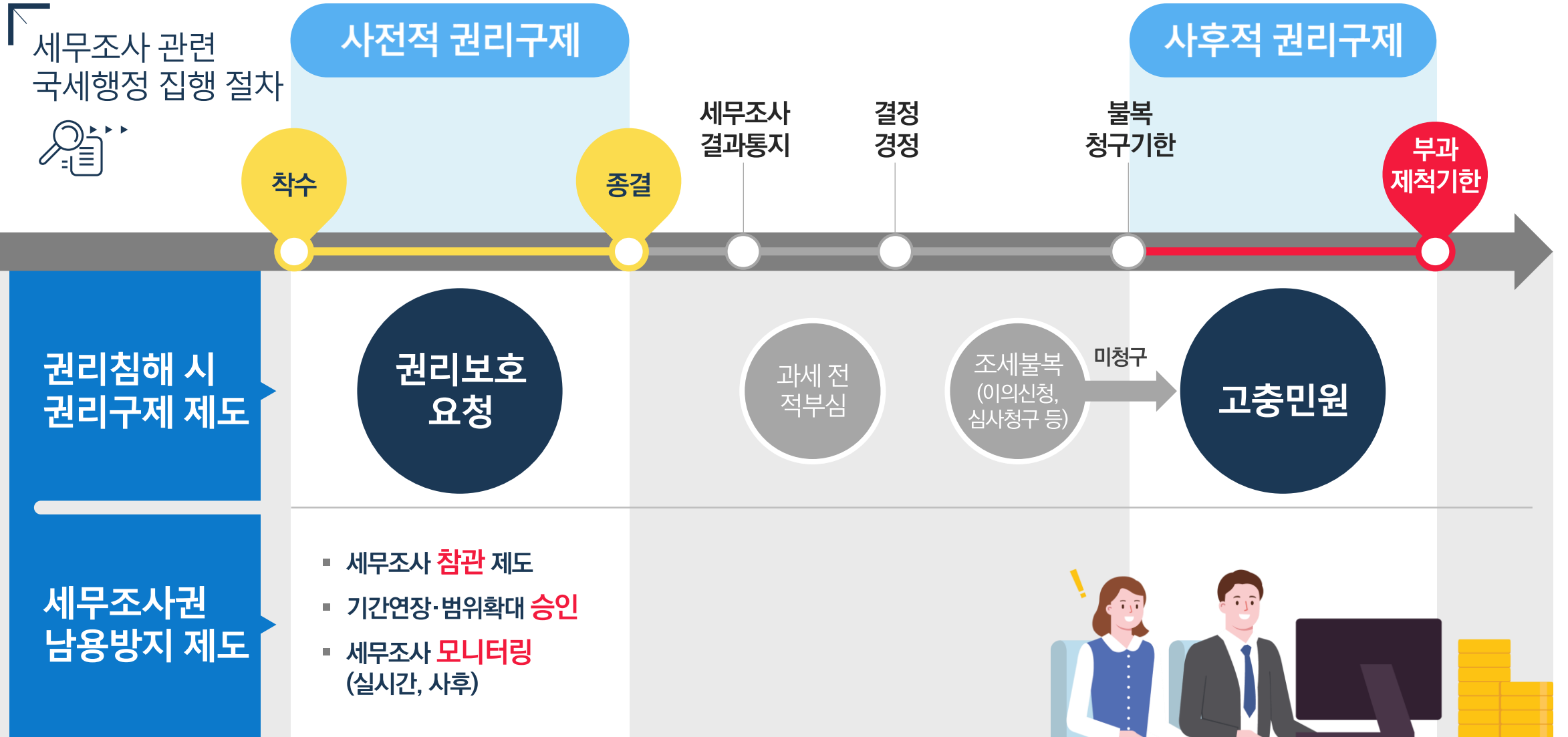
02 조직 및 제도 현황



03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 흐름



04 세무조사 분야 권리보호 업무 흐름



CHAPTER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의 이해

III



주요 권리보호 조직 및 제도

- ① 납세자권리헌장
- ② 납세자보호담당관
- ③ 납세자보호위원회
- ④ 권리보호요청
- ⑤ 세무조사기간연장범위확대
- ⑥ 세무조사중지승인
- ⑦ 납세자권익24

III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납세자권리헌장

국세기본법에 규정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의 권리**와 **국세공무원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 (사업자등록·세무조사 시 교부·낭독)



납세자권리헌장이란?

- ✓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규범을 담은 기본적인 준칙
- ✓ 납세자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자세히 알려주고, 국세공무원에게는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성실히 의무를 준수할 것을 요구



납세자권리헌장의 활용

- ✓ (문서 교부) 세무조사 시작, 사업자등록 발급 시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교부
- ✓ (낭독) 세무조사 시작 시 조사원증을 납세자에게 제시하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한 후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조사기간·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



02 납세자보호담당관(1/2)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전국 세무서에 배치하여 직무를 수행



납세자보호담당관이란?

- ✓ 세금의 부과·징수 및 조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을 해결하고 납세자 불만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국세전문 옴부즈맨(ombudsman) 제도를 말함
- ✓ 조사 부서와 납세자보호담당관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 세무조사가 세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청탁이 없는 깨끗한 세무조사 환경 조성 역할을 수행함



법제화

'10년 1월 1일 국세청 직위로는 유일하게
납세자보호관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국세기본법과 시행령에 법제화되었음

02 납세자보호담당관(2/2)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전국 세무서에 배치하여 직무를 수행

역할

- 1 세금관련 각종 고충민원 처리
- 2 세무조사 등 세금관련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제도 운영
- 3 납세자권리현장 제정·개정
- 4 조사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승인
- 5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
- 6 기타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사항



권한

- 1 위법·부당한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및 중지
-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 3 조사절차 준수 여부 점검, 세무조사 참관
- 4 위법·부당한 처분(세법에 따른 납부고지는 제외)에 대한 시정요구
- 5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 6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준법기능
강화

조사권 남용 방지
권한 법제화

- 납세자보호관의 조사팀 교체 명령,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 및 조사절차 준수 여부 점검 (세무조사 모니터링)
→ **[법제화]** 국세기본법 시행령 63의16①·④ 개정 반영('20.2.11.)

03 납세자보호위원회(1/4)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권익에 영향이 큰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승인 등을 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처리**하기 위해 국세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설치



납세자보호위원회란?

- ✓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고충민원**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전국 세무서, 지방국세청, 본청에 설치
- ✓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한 사안을 납세자가 취소·변경 요청하는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도록 '18.4.1. 국세청(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



외부 민간위원 위주의 구성

- ✓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제외하고 모두 민간위원(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교수 등)으로 구성
-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

03 납세자보호위원회(2/4)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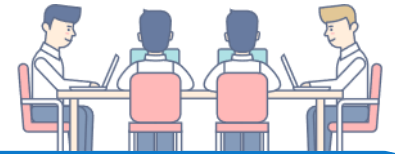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위원회 연혁



운 영



중소규모* 이외 납세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심의

* 중소규모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
100억원 미만 등



중소규모 납세자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에 대한
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03 납세자보호위원회(3/4)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심의 대상

○ 규정 : 「국세기본법」§81의18②③,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95①

구 분	지방국세청·세무서 위원회	국세청(본청) 위원회
세무조사 분야	<div data-bbox="726 499 879 664">권리보호 요청</div> <div data-bbox="904 506 1898 66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및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2 중소규모납세자 * 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에 대한 이의 제기 </div> <div data-bbox="726 685 879 778">기간연장 범위확대</div> <div data-bbox="904 706 1898 778">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중소규모납세자 외 납세자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승인 </div> <div data-bbox="904 821 1898 863">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세무조사 시 장부 등의 일시보관 기간 연장 </div>	<div data-bbox="2025 499 2178 664">권리보호 요청</div> <div data-bbox="2204 556 2382 692"> 재심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div> <div data-bbox="2191 821 2216 842">-</div>
일반 국세행정 분야	<div data-bbox="726 949 879 1113">권리보호 요청</div> <div data-bbox="904 956 1898 1113"> <ol style="list-style-type: none"> 5 신고내용 확인 절차 미준수 6 무리한 현장확인 및 과도한 자료요구 </div> <div data-bbox="726 1135 879 1228">고충민원 등</div> <div data-bbox="904 1135 1898 1228">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고충민원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div>	<div data-bbox="2191 1078 2216 1099">-</div>

납세자
이의제기

* 중소규모납세자 : 연간 수입금액 또는 양도가액이 100억 원 미만인 사업자

※ 「조세범처벌절차법」§2-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는 심의 제외

03 납세자보호위원회(4/4)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위원회 구성

위원
구성

국세청(본청) 위원회



내부 1명 (납보관)



외부 15명

위촉

국세청장

추천

기재부 5, 회계사회 2,
변호사회 2,
비영리민간단체 4

16

지방청 위원회



내부 1명 (납보담당관)



외부 17명

위촉

국세청장

추천

지방국세청장

18

세무서 위원회



내부 1명 (납보담당관)



외부 13명

위촉

지방국세청장

추천

세무서장

14

3군 세무서 위원회



내부 1명 (납보담당관)



외부 9명

위촉

지방국세청장

추천

세무서장

10

회의
구성



납보관 1명



외부위원 8명
(위원장 포함)

9



납보담당관 1명



외부위원 8명
(위원장 포함)

9



납보담당관 1명



외부위원 6명
(위원장 포함)

7



납보담당관 1명



외부위원 4명
(위원장 포함)

5

의결

회의 구성 위원 과반수 출석 /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

04 권리보호요청(1/5)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권리보호요청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국세행정 **집행(예정)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



권리보호요청 제도란?

- ✓ 세무조사를 포함한 국세행정 **집행** 또는 그 **준비과정**에서 국세공무원이 부당하게 납세자 권리를 **침해**하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
- ✓ '09.8월 납세자보호관 제도 시행에 맞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세무조사 등 **집행 부서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09.10월부터 시행



권리침해 유형별 행위 분류

- ✓ 세무조사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행위
- ✓ 일반국세행정 관련 권리보호요청 대상 행위



04 권리보호요청(2/5)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요청 대상

심의
대상

(1) 세무조사 관련

1 **세법·동 시행령·동 시행규칙에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세법 등에 위반된 조사**

2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재조사하는 행위** **중복 조사**

3 **세무조사 기간 연장·범위 확대에 대한 중소규모납세자의 세무조사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행위**

4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 조사 대상 세목 및 세액 계산 등과 관련 없는 장부 제출 요구
- 납세자 등의 동의 및 적법 절차 없이 임의로 장부 등을 열람·복사·일시보관
- 납세자 제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사적 사용

- 적법 절차 없이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
- 납세자 등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무관한 사적편의 제공 요구
- 조사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게 과표·세액 결정 등을 위한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 조사·제출 요구



5 **1 ~ 4 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04 권리보호요청(3/5)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요청 대상



(2) 일반국세행정 관련

- 1 **후속처분 지연**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 처분에 대한 **이의** 또는 **의무이행** 등의 절차가 이행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 2 **안내없이 처분** 사전예고(독촉) 없이 재산을 압류하거나 소명안내 없이 과세자료에 의한 고지처분을 진행하는 행위
- 3 **정보제공 거부**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 필요로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해 열람·제공을 요구한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 4 **사적편의 요구** 납세자(세무대리인)에게 금품·향응 또는 업무집행과 무관한 사적편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5 **비밀정보 누설**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6 **과도한 자료요구**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과도하게 요구,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
- 7 **해명자료 자료요구**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가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
- 8 **신고내용 확인** 신고내용 확인에 대한 적법 절차를 미준수 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
- 9 **무리한 현장확인** 현장확인 시 출장 목적과 관련 없이 무리하게 장부·서류 등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행위
- 10 1 ~ 9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심의 대상

심의 대상

심의 대상

'20.4.1. 시행

'20.4.1. 시행

04 권리보호요청(4/5)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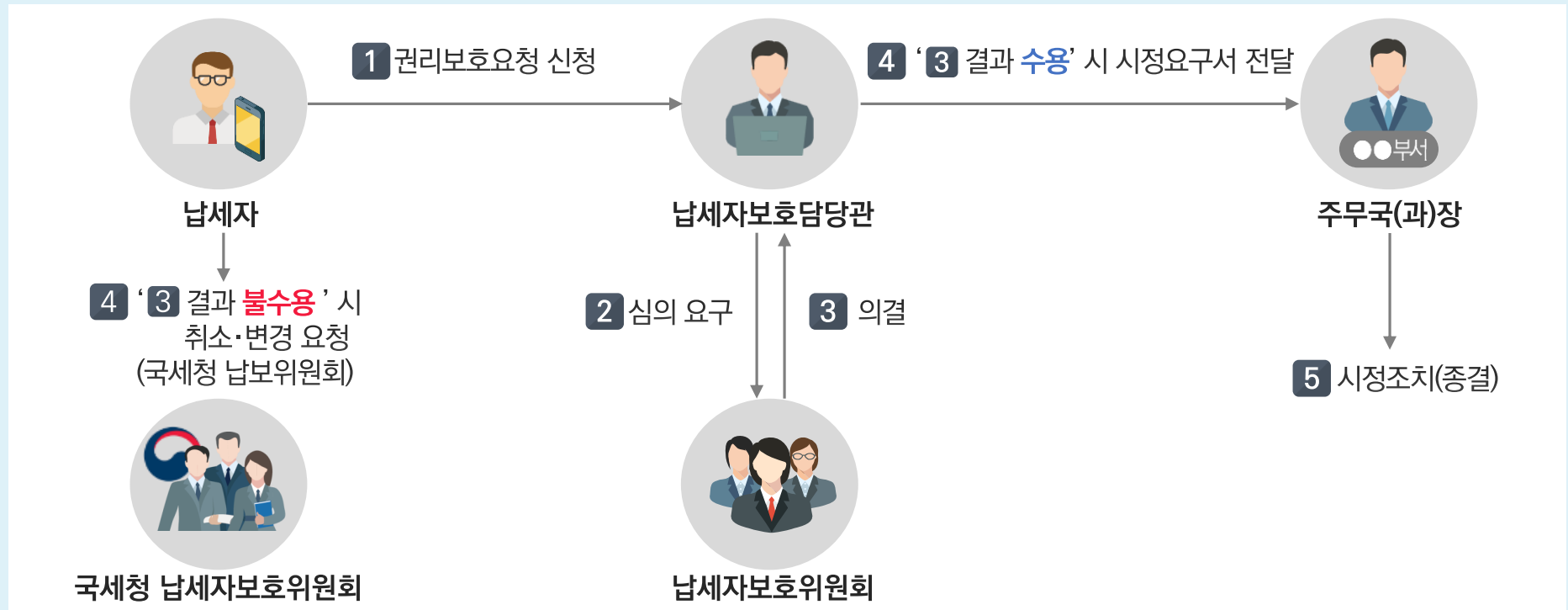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권리보호요청 처리 절차

- ✓ **세무조사 분야** 납세자의 주장이 타당하나 조사 담당 부서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관서장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 납세자 주장에 반한 관할 세무관서장의 결정에 대해 **7일 내에** 다시 국세청장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



04 권리보호요청(5/5)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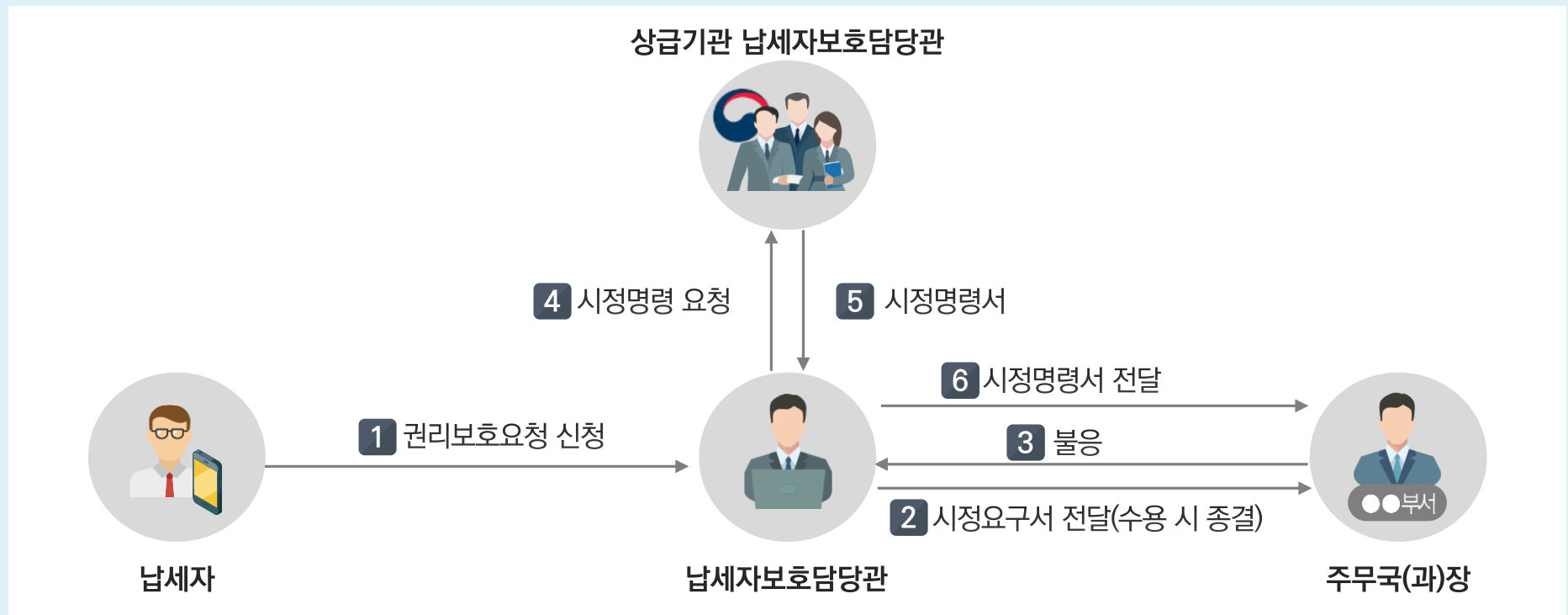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권리보호요청 처리 절차

- ✓ **일반 국세행정 분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적절한 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구
(①과도한 자료요구, ②무리한 현장확인, ③신고내용 확인 적법절차 미준수는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가능)
- 해당 부서가 시정에 불응하는 경우 상급 기관의 납세자보호담당관 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시정을 요청



04 권리보호요청(언론보도)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처리 사례

東亞日報

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A12면 사회

납세자보호관, 첫 세무조사 중지명령

국세청 10월부터 제도 시행

'1년만에 또 조사'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받아들여

1년 만에 세무조사를 다시 받게 된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국세청이 지난 달 26일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를 시행하면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 후 처음으로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국세청은 변호사 출신의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에 있는 P세무서에 대해 4일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납세자가 권리보호를 요청한 것은 지난달 27일 납세자보호관이 중지 명령을 내리기까지 단 9일이 걸렸다.

국세청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서비스업종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A 씨(47)는 2008년 8월 사업장 관할인 C세무서로부터 2007년도분 세무조사를 받았다. 그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

첫 세무조사중지 명령, 어떻게 결정했나

A 씨, 2008년 8월 사업장 관할인 C세무서로부터 2007년도분 세무조사 받음

세금 3000여만 원 추징

A 씨, 2009년 10월 거주지 관할인 P세무서로부터 2008년도분 세무조사 예고통지 발송(국세청, 10월 26일부터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 시행)

A 씨, 10월 27일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 제출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사대상 선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중지 명령 요청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11월 4일 세무조사 진행 중지 명령

자료: 국세청

세, 원천세 등으로 모두 3000만여 원 을 추징당했다.

1년여가 지난 올해 10월 A 씨는 거주지 관할인 P세무서로부터 2008년도분 세무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A 씨는 "1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억울하고 생업에도 부담이 있다"며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대상 선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A 씨의 사업장 매출액과 세금납부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1년 만에 다시 세무조사를 해야 할 만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세무조사 진행을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P세무서가 A 씨에 대해 1년 만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며 "납세자보호관은 국세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이 밖에도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 보고 또는 조사국장과의 협의가 일절 없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1577-0070)을 통해 납세자의 어의제기를 수시로 접수하고 있다.

손요림 기자 arysong@donga.com



세무조사 중지 최초 사례



04 권리보호요청(사례 1/5)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처리 사례



세무조사 분야 – 중복 조사 1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

요지

당초 확인 대상 범위를 벗어난 신고내용 확인 이후 동일한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은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사선정에 해당

사실
관계

- A세무서는 甲법인 지배주주의 과다 보수 혐의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 혐의를 확인하고자 '00.0월 0000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함
- A세무서의 신고내용 확인 실시 이후 B세무서는 甲법인을 '00.0월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혁신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안내를 하였음

납보위
결정

- A세무서는 지배주주의 과다 보수 혐의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 혐의 확인을 목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였으나, 0000년 계정별 원장, 일부 매출처·매입처 원장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단순히 당초 신고내용 확인 대상 혐의만을 검토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A세무서에서 실시한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이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00.0월 정기조사 대상자 선정은 중복 조사로서 위법함



04 권리보호요청(사례 2/5)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처리 사례



세무조사 분야 – 중복 조사 3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유무)

요지

1차 세무조사와 혐의만 다를 뿐 같은 자료를 분석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조세 탈루의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위법한 중복 조사임

사실
관계

- 요청법인은 0000 ~ 0000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 조사를 받았고(1차 세무조사), 조사 당시 예금 통장, 원시 장부 등 모든 자료에 대해 예치 조사를 실시하였음
- 이후 조사청은 0000 ~ 0000 사업연도에 대하여 가공 매출·매입을 통한 법인 자금 유출 혐의 관련 자료를 입수하였고, 이를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판단하여 요청법인을 비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함(쟁점 세무조사)

납보위
결정

- 1차 세무조사와 쟁점 세무조사는 혐의 관련 자료가 다를 뿐, 조사청이 계량 공정일지, PC 자료, 통장 등 동일 자료를 예치하여 분석한 사실이 확인됨
- 조사청이 수집한 쟁점 세무조사의 선정 근거라고 주장하는 과세자료는 자료의 진실성을 뒷받침할만한 입금증, 영수증, 통장 등 기타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조세 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04 권리보호요청(사례 3/5)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처리 사례



세무조사 분야 – 조사 선정 (위법·부당한 조사 선정)

요지

신고내용 확인 시 적격 증빙 미수취 혐의 등을 모두 소명한 요청인에게 세무조사를 할 정도의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신고내용 확인 결과에 따라 조사대상자로 선정된 것은 적법하지 아니함

사실
관계

- 조사청은 요청인의 0000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상 필요경비 신고 금액에 비해 적격증빙 수취 금액이 ○○백만원 적은 것으로 분석하고, 요청인을 신고내용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 요청인은 조사청이 수정신고 사항으로 안내한 필요경비 항목 중 일부 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은 수정신고 소득금액을 차감한 ○백만원을 최종 탈루 혐의 금액으로 확정하였고 이후 조사대상자로 선정됨

납보위
결정

- 조사청은 요청인의 수정신고 후 추가 소명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수정신고한 필요경비를 제외한 최종 탈루 혐의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 및 3만원 이하 소액 지출로 확인되어 구체적이고 명백한 세금 탈루로 보기 어려움
- 조사청이 확정된 최종 탈루 혐의 금액의 사적 사용 혐의에 대하여는 신고내용 확인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기초한 세무조사 선정 또한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04 권리보호요청(사례 4/5)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처리 사례



세무조사 분야 – 위법·부당 행위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요지

조사청이 조사 중지 기간에 요청인에게 연락하여 통화한 사실 및 조사청 요구로 방문한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해당 기간 중 질문조사 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조사 일수를 차감

사실 관계

- 조사청은 차명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 혐의로 요청인을 개인 통합 및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조사청은 조사 착수 시 일시 보관한 자료를 검토하여 000개 거래처에 대한 매출 누락 혐의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 소명 요구하였으나, 요청인은 자신의 수입금액이 아닌 타사업장의 구매대행을 한 것으로 주장하며 00개의 거래처에 대하여 소명하였고 타사업장과의 거래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이 지연 중임



납보위 결정

- 조사 중지는 납세자의 신청 및 금융거래 소명 요구에 대한 자료제출에 상당 기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조사청의 판단에 기해 조사 중지 여부 검토, 조사 중지 결과 통지 등이 적법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보임
- 다만, 조사청이 조사 중지 기간 중에 세무대리인에게 유선 연락하여 통화한 사실 및 조사청의 방문요구로 세무대리인이 조사청을 방문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바, 요청인이 제시한 통화 기록 등으로 확인되는 6일의 기간은 질문조사 행위가 있다고 보아 남은 조사 일수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04 권리보호요청(사례 5/5)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처리 사례



일반 국세행정 분야 – 과도한 자료요구

요지

요청인의 과세자료에 대하여 A세무서에서 세금 및 과태료 부과를 언급하며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과세대상 여부 해석에 대해 상급기관에 세법 질의·해석을 요청한 것을 감안하여 과도한 자료 요구를 일시 제지

사실
관계

- A세무서에서 요청인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근매식비를 소득세법 상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상의 과태료 부과 규정을 운운하며 '00~'00년도 해당 지급 내역을 자료제출 요구함
- 특근매식비의 경우 물건비로 예산 편성되어 있고 조직운영 경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단순히 근로소득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요청인은 기획재정부에 세법 질의·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임

납보위
결정

- 요청인의 주장대로 과세대상 여부 해석이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요청인이 '00.0월 기획재정부에 '특근매식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세법 질의·해석을 요청 중인 것이 확인됨
- 이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요청인에게 과세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청한 행위는 '과도한 자료 요구'로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 시정을 요구함



05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납세자 의견청취(1/3)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기간연장·범위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가 필요한 사유를 세밀히 검토하여 **과도하게**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



세무조사 기간연장 승인

중소규모 납세자

「국세기본법」§81의8

- ✓ 1회 연장 : 조사관서 장(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
- ✓ 2회 이상 연장 : 상급 세무관서 장(납세자보호관, 담당관) 승인

중소규모 이외 납세자

「국세기본법」§81의8

- ✓ **‘21.4.30. 시행**
-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납세자 신청 시 납세자보호담당관)

조세범칙조사

포탈법·질서법 등 포함
「조세범 처벌절차법」§5

- ✓ 모든 범칙조사(조사유형 전환 포함)는 지방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 사항이며 2차 이후 연장 시에도 동일

☞ ‘19.1.1.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세무조사 정의에서 조세범칙조사가 제외됨에 따라 「국세기본법」과 「조세범 처벌절차법」 모두 절차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조세범 처벌절차법」을 우선 따름

구 분	규모별	세 무 서		지 방 청	
		최초 연장	2회 이상 연장	최초 연장	2회 이상 연장
일반 조사	중소규모 납세자	세무서 납보담당관	지방청 납보담당관	지방청 납보담당관	본청 납세자보호관
	대규모 납세자	‘21.4.30.이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납세자 신청 : 납보담당관)			
‘19.1.1.이전 조세범칙 조사	중소규모 납세자	세무서장	지방청 조범위	지방청 조범위	본청 납세자보호관
	대규모 납세자	지방청 조범위			
‘19.1.1.이후 조세범칙 조사	모든 납세자	지방청 조범위			



05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납세자 의견청취(2/3)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기간연장·범위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가 필요한 사유를 세밀히 검토하여 **과도하게**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



세무조사 범위확대 승인

중소규모 납세자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49

- ✓ 1회 확대 : 조사관서 장(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
- ✓ 2회 이상 확대 : 상급 세무관서 장(납세자보호관, 담당관) 승인

중소규모 이외 납세자

「국세기본법」§81의8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49

'21.4.30. 시행

- ✓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승인

조세범칙조사

포탈법·질서법 등 포함
「조세범 처벌절차법」§5

- ✓ 모든 범칙조사(조사유형 전환 포함)는 지방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승인 사항이며 2차 이후 연장 시에도 동일

☞ '20.7.10.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으로 **중소규모납세자**에 대해 **부분 조사**로 **조사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 및 **담당관이 승인** 여부를 결정

구 분	규모별	세 무 서		지 방 청	
		최초 확대	2회 이상 확대	최초 확대	2회 이상 확대
일반조사 ▶ 타과세기간의 전부 ▶ 부분→전부 ▶ 세목별→통합, 타세목	중소규모 납세자	세무서 납보담당관	지방청 납보담당관	지방청 납보담당관	본청 납세자 보호관
	대규모 납세자	'21.4.30. 이후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조세범칙 조사	모든 납세자	지방청 조범위			



05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납세자 의견청취(3/3)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기간연장·범위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또는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가 필요한 사유를 세밀히 검토하여 **과도하게** 세무조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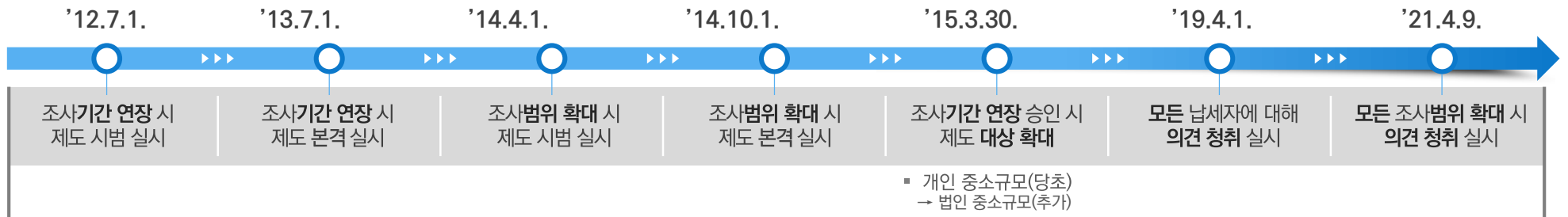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

개 념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범위확대 심리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청취 제도를 도입하여 심리의 공정성 제고



구 분	의견 청취 대상	제외 대상	청취 방법
기간 연장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납세자에 대한 일반조사 중 납세자가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거래처 조사, 거래처 및 금융거래 현지확인 필요한 경우, 세금탈루혐의에 대한 해명 등을 위해 납세자가 신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료상, 탈세제보 관련 조사 구체적·명백한 탈루혐의가 있어 조사 관련 비밀이 조사대상자에게 유출 우려 폐업 등 납세자와 연락두절인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선 청취 팩스, 이메일 가능
범위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납세자에 대한 일반조사 중 모든 조사범위 확대에 대하여 	<p>'21.4.30. 시행</p>	



06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세무조사 중지 승인

조사팀의 **반복적 세무조사 중지**에 대해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승인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종결 지연 등으로 인한 납세자의 권익침해 예방



세무조사 중지 승인

대상 조사

- ✓ 개인·법인 통합, 부가, 양도, 상속·증여, 자금출처, 주식변동 조사

승인권자

- ✓ 관할 관서 **납세자보호담당관** 승인

☞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및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승인

신청 대상

- ✓ 중지가 **3회차 이상**으로 **조사팀**이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장이 승인

* (제외) 납세자의 소재불명, 해외출국 등 불가피한 경우와 조세범칙조사 제외

구 분	유형별	세 무 서		지 방 청	
		2회 이하	3회 이상 중지	2회 이하	3회 이상 중지
일반 조사	조사팀 신청	조사관서장	세무서 납보담당관	조사관서장	지방청 납보담당관
	납세자 신청	조사관서장		조사관서장	



중지 사유

- 1 **[조사 연기신청 사유 해당]** 세무조사 **연기신청 사유**(화재, 재해, 질병, 압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납세자**가 조사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 2 **[국외 자료 수집 등]** 국외 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 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 3 **[조사 진행 곤란]** 납세자 소재불명, 해외출국, 장부·서류의 은닉 또는 제출지연·거부, 노동쟁의 발생 등
- 4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세무조사의 일시중지를 요청하는 경우

07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1/2)

납세자권리현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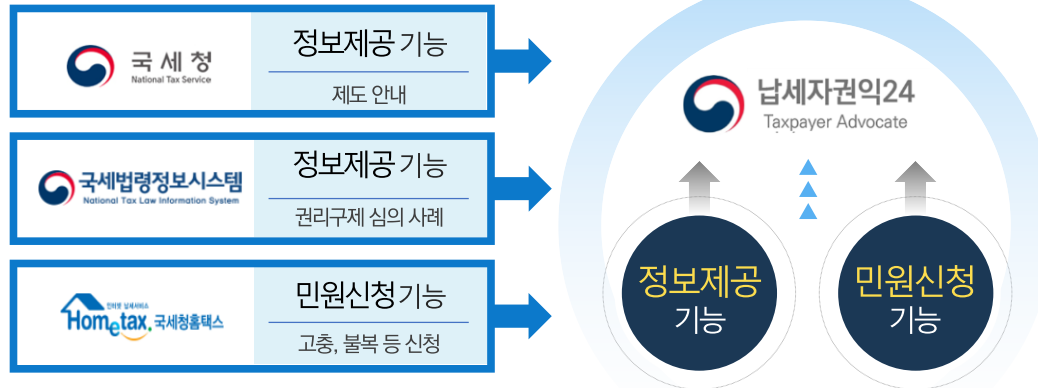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납세자권익24

권익보호 전담 홈페이지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국세청 각종 사이트에 분산된 **권익보호 정보 제공** 및 **권익보호 신청 창구**의 일원화

권익보호 전담 홈페이지 구축



국세청 사이트와 구분된 독립적인
권익보호 사이트 신설

납세자보호 조직의
독립적 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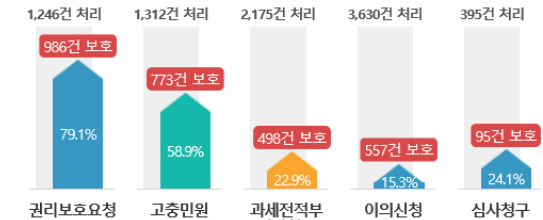
납세자 권익보호 정보의 체계적 제공

납세자보호 제도의
활성화 추진

접속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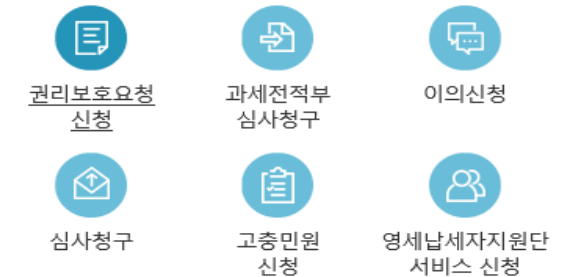
www.nts.go.kr/taxpayer_advocate/main.do

주기적 성과 공개



▶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 성과 주기적 공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세정지원 및 권리구제 민원은 원스톱으로 편리하게 신청

07 납세자권익24 홈페이지(2/2)

납세자권리헌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위원회

권리보호요청

기간연장·범위확대

세무조사 중지 승인

납세자권익24



CHAPTER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의 이해

IV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 방안

- ① 조사팀 교체 명령권
- ② 세무조사 참관제도
- ③ 세무조사 모니터링

III 조사팀 교체 명령권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참관 제도

세무조사 모니터링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중 조사공무원의 **적법 절차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



조사팀 교체 명령권이란?

- ✓ 납세자가 신청한 권리보호요청에 대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세무조사 중 조사공무원의 행위가 **위법·부당한 것으로 의결**되는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직접 조사팀 교체**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
- ✓ 조사팀 교체는 세무관서장의 고유 권한에 해당하나, 조사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의 재발 방지**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의 시정 기능을 강화**



위법·부당한 행위

※ **세무조사 중인 세무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64①-4호)

- | | |
|--------------------------------|---------------------------------|
| 1 조사대상 세목 등과 관련 없는 장부 요구 | 2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조사 기간연장, 범위확대, 중지 |
| 3 적법절차 없이 임의로 장부 등 열람·복사, 일시보관 | 4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누설하거나 사적 사용 |
| 5 조사 중지 기간 중 납세자에 질문검사권을 실시 | |

02 세무조사 참관 제도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참관 제도

세무조사 모니터링

세무조사 참관 제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참관하여 **조력**하고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세무조사 참관 제도란?

권익 보호

세무조사로 인한 영세자영업자 등의 심적 부담을 완화하고
세무조사 시 적법절차 준수 등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

조사 적법 절차 감독

납세자의 신청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세무조사 현장에
참관하여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



신청 대상

개 인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 과세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법 인

일반통합조사 대상자로서 조사대상 과세기간
중 연간 수입금액이 20억 원 미만인
비상장·비계열 영리내국법인

☞ 과세기간이 2개 이상인 경우 **연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판단

제외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 서비스업 등 지원배제업종**
영위자, 자료상 등 **불성실사업자 제외**

03 세무조사 모니터링(1/3)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참관 제도

세무조사 모니터링

세무조사 모니터링

조사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 유도** 및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실시



세무조사 모니터링이란?

- ✓ 세무조사 과정의 **적법절차 준수**와 세무조사 **권한남용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세무조사의 신뢰도**를 제고
 - 세무조사 기간 중에 실시하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결과 통지서 발송 이후 실시하는 『**사후 모니터링**』으로 나누어 **Two-Track**으로 실시



03 세무조사 모니터링(2/3)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참관 제도

세무조사 모니터링



단계별 모니터링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진행 중 납세자 설문**을 통해 조사팀의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여 조사팀의 **권한남용**을 **확인**하는 즉시, **시정 조치**하거나 **권리보호요청**을 **안내**하여 납세자 권리를 보호

사후 모니터링

세무조사가 **종결**되어 **조사결과 통지** 이후 납세자 **설문**을 실시하여 세무조사의 **투명성·신뢰성** 및 조사공무원의 **친절성·청렴성** 등 세무조사 **만족도**를 **평가**하고 추후 **세무조사 집행 개선**에 **활용**

세무조사 착수

50% 경과

세무조사 종결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실시간 모니터링 (착수단계)

실시간 모니터링 (진행단계)

실시간 모니터링 (종결단계)

사후 모니터링

착수 3일 이내 (5개 설문)

조사기간 50% 경과 (5개 설문)

종결 3일 이내 (5개 설문)

결과 통지 3일 이내 (12개 설문)

세무조사(사전)통지서 송부,
권리보호제도 설명 등
조사착수시 이행사항 확인

사전 협의방문 일정 준수,
공식 문서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해명 기회 제공 등 확인

연장확대중지통지서 적정,
중지기간 중 실질적 조사행위,
수정신고유도 등 확인

세무조사에 대한 투명성(3개),
신뢰성(3개), 친절성(2개),
청렴성(4개) 등 만족도 평가

「세무조사 실시간 체크리스트」 활용

「세무조사 사후 체크리스트」 활용

“세무조사 적법절차 준수 여부 확인”

“세무조사 만족도 평가”

03 세무조사 모니터링(3/3)

조사팀 교체 명령권

세무조사 참관 제도

세무조사 모니터링



스마트 모니터링

'21.1월 세무조사 적법절차 준수 여부 확인, 만족도 평가 등을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

01

설문 방식 추가

종전의 전화·팩스·현장방문 대신
PC·모바일 등 ON-Line 방식의
간편한 **설문 참여방법**을 추가

02

체크리스트 개선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설문 항목**을
단계별 모니터링 취지에 맞도록 **재구성**

* (실시간 모니터링) 세무조사 적법절차 준수 여부 확인
/(사후 모니터링) 세무조사 만족도 평가

03

전산관리시스템

설문 항목별 평가 결과의 **엔티스(NTIS)**
자동 수록 등 전산관리시스템을 구축



1 모니터링 참여 문자 발송



2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모니터링 참여

3 (모니터링 결과) 자동 수록, (개선 의견) 별도 수동 입력

4 모니터링 결과·통계
전산 관리

CHAPTER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의 이해

V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 1 고충민원
- 2 영세납세자지원단



III 고충민원(1/3)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고충민원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 인해 권익을 침해 받은 납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불복**을 **청구하지 못해** 권익을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 고충민원 제도를 이용



고충민원이란?

사후적 권리구제

- ✓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 ✓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으로 납세자가 신청한 민원을 의미



영세 납세자 권리구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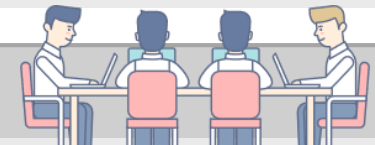
▶ 세무조력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행정적 사후 권리 구제**

- 1 세법에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영세납세자가 법적 구제절차인 불복청구 제도 이용하기 곤란
- 2 부당한 처분으로 권익을 침해 받은 영세납세자가
- 3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불복청구를 하지 못해 권익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 → 고충민원 신청

고액 고충민원 관리강화

▶ 고액 고충민원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 관리로 부담 환급 방지**

- 1 고액 고충민원도 원칙적으로 접수하여 소관부서 검토 후 처리 → 불수용 시 명확한 근거와 사유 기재
- 2 인용된 고액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고액 고충민원 분석보고서」를 작성 → 감사관실 통보



미 고충민원(2/3)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고충민원 vs 불복청구

대상자

세무관서장의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이익을 침해 또는 불편·부담을 받은 납세자

청구기간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 **30일 전**

처리기간

10일(소액), 14일 (1회 연장 시 30일 내)

제외대상

- 1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2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3 감사원장 등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지시**에 의하여 **처분** 사항
- 4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 관련 고소·고발**
- 5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에 따른 **통고처분** 및 제17조에 따른 **고발**
- 6 「국세기본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않은** 사항
- 7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 진행 중**인 사항으로 쟁점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속하지 않는 법인** 신청
- 9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채납정리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불복 청구 (국세기본법)

과세전
적부심사이의
신청심사
청구심판
청구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및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이익을 침해 당한 자

통지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

3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30일

90일

90일

- 1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단,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
- 2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 3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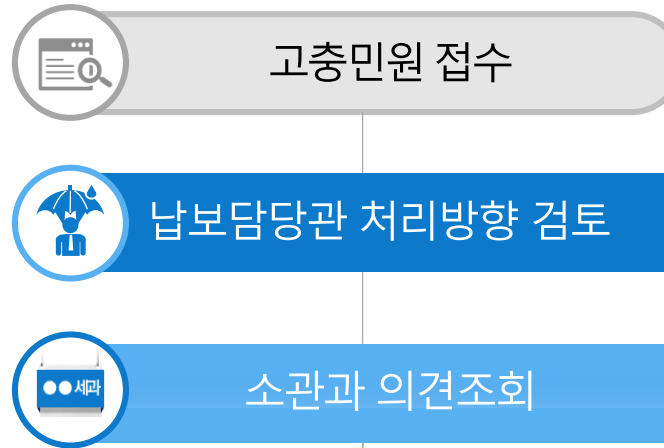
III 고충민원(3/3)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처리 절차



미 고충민원(사례 1/5)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처리 사례 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지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고한 청구인이 양도주택 이외에 농가주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증빙을 검토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사실 관계

- 청구인은 일반주택(서울 서대문구 소재) '00.0월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신고함
- 처분청은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아들 정○○이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 외에 농가주택(충북 ○○ 군 소재)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정하고 양도소득세 000백만원을 고지함
- 청구인은 쟁점농가주택이 조특법§99의4 농어촌특례주택에 해당하여 주택수에서 제외되므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줄 것을 고충민원 신청함



미 고충민원(사례 2/5)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처리 사례 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지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고한 민원인이 양도주택 이외에 농가주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증빙을 검토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주무 부서 의견

- 청구인은 쟁점농가주택의 대지면적이 000㎡ 중 000㎡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00.0월에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은지사에서 측량한 지적측량 결과부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00.0월 측량한 것으로 일반주택 양도 당시의 주택부수토지 현황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 조특법§99의4에 따라 농가주택을 보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려면 주택 대지면적이 660㎡ 이내여야 함

사실 관계 확인

- 납보담당관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바, 쟁점농가주택에 대한 위성사진 상 일부 면적이 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
-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이 0000년 000㎡로 기재된 것이 0000년부터 쟁점 토지 면적을 제외한 000㎡로 변경되었음



미 고충민원(사례 3/5)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처리 사례 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지

처분청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신고한 민원인이 양도주택 이외에 농가주택이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적극적으로 증빙을 검토하고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납보위 결정

고충민원 조치 결과 (인용)

- 쟁점농가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위성사진이 0000년과 최근 모습에 차이가 없는 점,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상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면적이 0000년부터 000㎡ 이내로 변경된 점, 한국국토정보공사 보은지사에서 측정한 공용 도로 면적이 000㎡로 확인되는 점, 쟁점농가주택의 이장 등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에서 일부 면적이 공용 도로로 사용된 점이 확인되는 등 청구인 주장이 타당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 인용 결정됨



미 고충민원(사례 4/5)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처리 사례 (②)



법인세 추계결정 고지분을 장부 등 실질에 따라 재경정

요지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추계결정 고지하였으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충민원 신청 후 제출된 장부 및 증빙을 적극 검토하여 주무부서에 시정할 것을 요구

고충 내용

- 청구법인은 0000~0000 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A세무서에서 법인세를 추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세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함
-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추계 결정된 법인세를 실제 매출과 비용을 반영하여 세액을 경정해 달라고 고충민원을 신청함

주무부서 의견

- 청구법인의 법인세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3의 규정에 따라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경정청구가 불가함
- 법인세 고지서의 등기우편 송달 내역을 검토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고지서를 송달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의 고충민원을 인용할 수 없다고 회신함



미 고충민원(사례 5/5)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처리 사례 (②)



법인세 추계결정 고지분을 장부 등 실질에 따라 재경정

요지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추계결정 고지하였으나, 납세자보호담당관이 고충민원 신청 후 제출된 장부 및 증빙을 적극 검토하여 주무부서에 시정할 것을 요구

사실 관계 확인

- 납보담당관은 고충민원 신청 이후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세 신고서와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내역, 원천징수영수증, 수출 송장, 수출신고수리내역서, 영세율첨부명세서 등 법인세 신고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함
-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결정 및 경정) 등 규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오류나 누락을 발견 시 다시 경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확인함

납보 담당관 결정

고충민원 조치 결과 (인용)

- 납보담당관의 법인세 경정 가능 의견을 주무부서에서 수용하여, 당초 법인세 추계결정 고지분에 대해 기한 후 신고서와 증빙을 토대로 법인세를 경정하고 미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매월 성실히 분납할 것을 약속함



02 영세납세자지원단

고충민원

영세납세자지원단

영세납세자지원단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을 제공하여 세금 고충 없이 생업에 전념하도록 영세납세자지원단을 **전국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설치

운 영

공식명칭은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헌신적으로 봉사할 **외부 세무전문가**를 세무서 형편에 따라 5~15명 선발하고 **나눔 세무사·회계사**로 위촉하여 **풀(Pool)제**로 운영

과세자료처리, 세무조사 등 **과세 전(前)** 단계부터 불복청구, 고충민원에 이르기까지 세금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무료 세무자문 서비스**를 제공('09.5월 시행)

바쁜 생업활동으로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12.4월 시행), **외국인 다문화센터**('14.5월 시행), **장애인 사업장**('16.7월 시행), 창업보육센터 등에 **현지 출장**하여 **세금신고 지원**과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



신규(예비) 창업자에게 창업단계부터 최초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스스로 세무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10.4월 시행)

폐업한 영세사업자에게 폐업일 이후부터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세금문제 해결을 도와 조기회생 하도록 **1:1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 제공('13.9월 시행)

납세자 권익강화▶▶▶▶



권리보호요청



납세자보호위원회



고충민원



세무조사 견제



영세납세자지원단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

감사합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제도의 이해

